

조선청년총동맹

사회주의 청년단체의 지도기관

1 청년단체의 출현과 조선청년연합회의 결성

‘젊은이’는 순수 우리말로써 18~30세 전후의 연령층을 일컬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 일본을 통해 ‘청년’이란 용어가 들어오면서 ‘젊은이’는 서서히 ‘청년’으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03년 황성기독교청년회(YMCA의 전신)가 설립되면서부터 ‘청년’이란 용어는 점차 퍼지기 시작하였고, 1905년 애국계몽운동 이후 신문이나 학회지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때 ‘청년’은 학생 또는 30대 전후의 젊은 지식인을 가르켰다. 또한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룰 ‘새로운 역사 주체’로서 식민지 조선이 처한 현실을 극복할 대안세력으로 주목받기도 하였다.

청년단체 역시 ‘청년’이란 용어 유입과 더불어 조직되기 시작하였으나 급격히 확산된 것은 1919년 말부터 1920년 초에 걸쳐 청년회·청년구락부(靑年俱樂部)·청년수양회 등의 명칭의 청년단체가 군·면·리에 대거 조직되었다. 특히 3·1운동 실패 이후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실력양성과 문화향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를 지도할 상설기관의 필요성이 청년회의 결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920년 봄 전국 각지에 청년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자, 서울의 각계 지도자들은 청년단체를 이끌 통일된 지도기관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1920년 12월 2일 121개 청년단체가 가입한 가운데 조선청년회연합회(朝鮮靑年會聯合會)가 창립되었다. 초기 청년회 창립에는 지주와 상공인·신문기자·교사·종교계 지도자 등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은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었고, 이들이 초기 청년회 간부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인적 구성은 초기 청년회연합회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특히 지도부는 민족주의 계열이 장악한 형태로 실력양성론 입장이 강하였다. 따라서 실력양성론에 바탕한 수양과 계몽운동 등 비정치성 중심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청년회연합회는 출범 초기 전국적인 청년단체 연합체로서 위상을 갖추었음에도 중앙집권적 통일조직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일종의 협의체 내지 연락기구로 머물렀다. 이러한 전망없는 활동으로 1921년부터 청년단체의 활동이 부진상태에 빠지고 1922년부터 사회주의 청년단체가 조직화하면서 청년단체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1922년 4월 청년회연합회 제3회 총회에서 연합회의 노선을 둘러싸고 민족주의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간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 결과 서울청년회를 비롯한 사회주의계열 19개 단체가 연합회를 탈퇴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계열의 청년단체 탈퇴 이후에도 청년회연합회의 활동은 순

회 강연을 위주로 한 계몽활동에 집중되어 있었고, 1923년에는 실력양성론 위주의 민립대학(民立大學) 설립운동과 물산장려운동(物産獎勵運動)을 주도하는데 치중하였다. 한편, 1922년 4월 청년회연합회를 탈퇴한 서울청년회 등 사회주의계열은 전국적 청년운동기관을 조직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1년여 만인 1923년 3월 24일부터 6일 동안 전조선청년당대회(全朝鮮靑年黨大會)가 개최되었다. 대회에는 90여 단체와 대표 150여 명, 개인참가자 50여 명이 참가하여 분과별로 부인·교육·종교·경제·노동·민족·사회·청년회 발전문제 등을 토의하였다. 청년당 대회는 '계급의식 고취와 공산주의 사상 선전'에 주력하면서 청년단체를 '대중적 해방운동의 전위대'로 만들기로 결의하였다.

전조선청년당대회를 계기로 청년운동의 중심세력은 노동자·농민 중심의 무산계급운동으로 집중되었다. 이로 인해 청년회연합회는 지지기반을 상실해 나갔다. 이후 청년운동의 가장 강력한 지도세력이 된 서울청년회는 1923년 12월 제3회 정치총회에서 강령을 바꾸어 '신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 '무산대중 해방운동의 전위(前衛)'가 될 것을 선언하였다. 이어 새로운 전국적 청년단체의 결성을 준비하는 한편, 세력이 급속히 약화된 청년회연합회와 함께 계급운동에 기초한 전국적 청년단체를 조직하기로 합의하였다.

2 조선청년총동맹의 결성과 초기 활동

1924년 2월 서울청년회와 청년회연합회는 조선청년총동맹(朝鮮靑年總同盟, 이하 청총으로 약칭함) 발기준비회를 조직하였다. 또한 이즈음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 중앙총국도 신흥청년동맹(新興靑年同盟)을 결성하고 청총 건설에 함께 나섰다. 1924년 3월 이 3개 단체 대표자를 중심으로 청총창립위원회가 구성되었고, 4월 21일 서울 종로 중앙청년회관에서 223개 단체 대표와 7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선청년총동맹이 창립되었다.

23일까지 3일간 진행된 창립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과 중앙검사위원을 선출하였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서무부·조사부·사회부·교육부 등의 각 부서를 담당할 상무위원을 선출하였다. 중앙집행위원은 최창섭(崔昌燮)·한중유(韓宗瑜)·신태악(辛泰嶽)·박원희(朴元熙)·정백(鄭栢)·최창순(崔昌淳)·조봉암(曹奉岩)·김찬(金燦)·인차철(印車哲)·변희용(卞熙鎔)·연재선(延在璿)·김두수(金斗洙)·김도(金濤)·조기승(趙紀勝)·김단야(金丹冶)·함선호(咸渲浩)·안준(安浚)·이운혁(李雲爌)·김교영(金敎英)·임봉순(任鳳淳)·이영(李英)·송봉우(宋奉瑀)·최창익(崔昌益)·이길용(李吉用) 등이며, 중앙검사위원은 한신교(韓愼敎)·박헌영(朴憲永)·최순탁(崔淳鐸)·강제모(姜齊模)·주종건(朱鍾建) 등이었다.

청총은 강령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청년운동을 전개할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실상 전국 청년단체의 지도기관임을 표방하였다. 청총은 창립대회에 이어 임시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일제 경찰은 강령 등을 문제삼아 임시대회를 해산시키는 한편, 청총 관련 회의와 집회를 모두 금지시켰다. 이로 인해 청총 활동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청총은 조선총독부 정책과 관련된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민족운동세력과 손을 잡고 대중선전운동을 전개하였다. 청총은 1924년 4월 결성된 화요파 중심의 조선노농총동맹(朝鮮勞農總同盟)과도 연합하여 일제의 언론·집회 탄압에 저항하기 위한 언론집회압박탄핵회(言論集會壓迫彈劾會)

를 조직하고 6월 20일 천여 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언론집회압박탄핵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칼로자 추도기념일(1월 15일), 레닌 사망 추도기념일(1월 21일), 파리콤문 기념일(3월 15일), 국제여성의 날(3월 8일), 국제무산청년데이(9월 첫째 일요일), 러시아혁명 기념일(11월 7일) 등 각종 기념일에 강연 및 가두 행진, 선전빠라 배부 등을 통해 사회주의에 대한 대중선전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 대부분은 일제 경찰에 의해 금지되었다.

청총은 창립 1년 만인 1925년 6월경 254개 단체와 회원 5만여 명을 거느리는 단체로 성장하였다. 이로 인해 조직 정비와 강화가 요구되었다. 청총은 1925년 7월 조직을 보다 전문화하기 위해 각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동시에 전문가를 임원으로 선정하여 대중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초기 도시와 읍내 중심으로 전개된 청년운동을 농촌으로 확대하기 위해 농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또한 1926년 3월 초기 불완전한 조직방침을 논의하여 총동맹-도연맹-부연맹-(면)청년회-도시:지부(직업별청년회)-공장반(3명)으로 결정하였다.

한편, 청총 창립 이후 기존 청년단체는 '혁신총회' 형태를 통해 사회주의적 청년단체로 전환하거나 사회주의 이념을 표방하면서 새로운 청년단체를 결성하였다. '혁신'의 이유는 기존 청년단체의 조직이 간부 중심의 비민주적이라는 것과 장년층의 유지 중심으로 운영된 탓에 재정과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리하여 '혁신'의 내용은 기존 회장제를 집행위원제로 변경하여 민주적 의사 결정 확대, 장년층을 배제하고 청년이 직접 청년회를 운영하기 위한 연령제한 실시, 장년층 유지들의 후원금으로 충당하던 재정을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여 독자성을 유지하는 것, 부서의 개편(집행위원과 감사위원을 두고 서무부·교양부·조사부 설치하는 것) 등이었다. '혁신총회'의 결과 지방에서는 사회주의 계열의 청년단체가 급격히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1926년 중반까지 전국적으로 60여 개가 넘는 군(郡)·부(府) 지역에 청년단체 연합기관으로 군·부청년연맹체가 조직되었으며, 경기도 등지에 7개의 도(道) 연맹이 결성되었다. 1925년 후반부터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노동·농민청년을 분립시켜 노동청년회와 농민청년회를 결성하는 한편, 형평청년회를 비롯하여 양북·양화·운수·점원·인쇄 청년회 등의 직업청년회가 상당수 출현하였다. 이는 과거 지식인 청년 중심의 운동방식을 극복한 노력의 결실이었다.

3 청년운동의 방향전환과 조선청년총동맹의 '신운동방침'

1926년 중반 청년운동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6·10만세운동 과정에서 확인된 민족통일전선의 가능성, 7월 조선민흥회(朝鮮民興會)의 발기 등은 청년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926년 7월 함북청년연맹이 청년단체는 종교·비종교·노동자·농민을 구별하지 말고 통일 단결할 것을 결의하였고, 8월에는 고려공산청년회가 청총의 강령을 계급적인 것에서 민족적인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이는 과거 무산계급 청년만으로 조직하던 제도를 폐기하고 종교단체와 민족주의단체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특히 1926년 11월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이 '정우회선언(正友會宣言)'을 공표한 것을 계기로 청년운동의 방향전환 열풍이 불어왔다. 정우회선언의 주요 내용은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파벌박멸', '이론투쟁', '민족단일당 결성' 등이었다. 서울지역 주요 청년단체들은 청총에 대하여

계급 위주에서 벗어나 민족적 의식을 토대로 한 강령을 채택하도록 요구하였다. 12월에는 서울 지역 20개 청년단체 연합체인 경성청년연합회에서 간친회를 열고 종교청년단체를 민족주의 청년단체로 인정하는 한편, 이들을 망라한 총기관을 설치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운동의 방향전환에 대해 대다수 청년단체들은 공식적인 의사표명을 보류하였고, 청총은 창립 이후 집회금지 상태와 지도부 내분으로 1927년 초까지도 향후 운동방침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1927년 5월 신흥청년동맹이 정기대회를 개최하고 청년운동의 방향전환을 주장하는 한편, 집행위원회 명의로 청총에 건의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청총은 1927년 6월 제4회 집행위원회에서 '신운동방침'을 수립하고 청년운동의 방향전환을 선언하였다. '신운동방침'의 요지는 "무산계급 청년운동을 전민족적 청년운동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청총은 8월 새로운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청총 창립 이후 처음으로 구성된 '통일'지도부라고 평가하였다.

청총은 1927년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에 걸쳐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청년운동 방침을 확정하였다. 즉 군·부동맹과 도연맹의 강령과 규약을 통일하였고, 연령문제와 조직, 교양문제 등을 결정하였다. 이것을 일컬어 '신운동방침'이라고 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청총 조직의 기본 단위는 기존 '개체단체'에서 '군·부청년동맹'으로 개편되었고 동맹 아래 지부와 반을 두었다. 이는 분열된 청년운동전선을 통일하고 광범위한 청년을 끌어들이 청년운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청총의 군·부청년동맹 결성방침이 1927년 말부터 1928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경상도와 함경도, 전남에 집중되었던 것과는 달리 충북·평남·전북지역에서도 단일 청년동맹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이전과는 달리 민족주의계열 청년단체나 종교청년단체도 포괄하였다. 단일 청년동맹 결성방침은 면(面) 단위에 지부, 동(洞)·리(里) 단위에는 반(班)을 결성하려 하였으나, 반 결성활동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 시기 주목할 만한 것은 청년단체에 소년부와 여자부를 두고 해당 계층을 지도하는 한편, 학생운동에 대한 지도에도 적극 나섰다는 점이다. 그중 독서회(讀書會)를 중심으로 한 학생층의 지도는 1929년 11월부터 1930년 3월 사이 전국적으로 일어나 광주학생운동(光州學生運動)의 기폭제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4 지도노선을 둘러싼 대립과 해소(解消)

1929년 11월 전남 광주(光州)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반일시위운동은 1930년 봄까지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노동자 동맹파업과 소작쟁의 역시 1930~1931년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청년들은 학생들의 항일시위 확산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격문살포, 시위, 면사무소·주재소 습격 등 항일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청년들의 조직화도 활발하게 전개되어 1930년에는 청년단체가 1,500여 개로 증가하였다. 청년단체의 증가와 항일투쟁이 활발해지자, 일제는 청년단체 활동에 대해 더욱 탄압을 강화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청총 내부

에서는 노동조합·농민조합 내 청년부 결성과 기존 청년단체 내 '혁명적 반대파' 결성이라는 새로운 조직방침이 제기되고 일부 추진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인 견해는 아니었다.

1930년 중반 이후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합법공간 활동에 주력하자는 주장인 '합법운동' 노선을 제기하면서 '합법운동'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화되었다. 이 '합법운동' 노선은 청총으로 번졌다. 청총 중앙의 다수를 차지한 '합법운동파'는 1930년 10월 20일 청총 임시사무 집행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형위원에 의해 중앙집행위원을 개선한다는 방식을 관철시켰다. 이는 '합법운동파'가 중앙집행위원을 장악함으로써 자신들의 운동론을 청총의 지도방침으로 확정하려는 의도였다. 이는 청년동맹대표자대회를 통해 진용을 정비하고자 했던 흐름과 대비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청총의 태도에 각지 청년동맹은 강하게 반발하였다.

지방 청년동맹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12월 5~6일 청총 중앙집행위원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6개조의 정책을 채택하면서 군·부동맹을 폐지하고 본부 직속의 지부제로 변경하는 통일적 단일조직을 만들 것을 결의하였다. 간담회 내용이 전해지자, 각지 청년동맹은 이를 개량화 또는 기회주의 책동이라고 규탄하였고, 지방 청년동맹들은 도연맹을 통해 반대운동을 도 전체로 확산시키는 한편, 청총 중앙과 운동방침을 재정비하고자 청년동맹대표자대회 재소집을 전국적으로 호소하였다. 이렇듯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합법운동파'는 집행위원장 윤형식과 상무 이사 추병환·김약천 등의 사임으로 사태를 무마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청년들은 청총의 개량화 경향이 청총 조직 자체의 결함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신간회 해소 논의와 맞물리면서 청총 해소론으로 이어졌다.

1931년 1월, 조선농민총동맹의 한병락(韓炳洛)이 청총 해소와 함께 노동자·농민 청년들을 각 조합 청년부로 재편성하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수원청년동맹은 청총 해소를 정식 제의하였다. 이후 청총과 지역 청년동맹 해소 논의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5월까지 진행된 청총 해소논쟁에 대해 지방 청년동맹은 해소에 찬성하였다. 이중 8개 도연맹 가운데 5개 도연맹이 해소를 결의하고 각 도내 청년동맹의 해소운동을 지도하였다. 이렇듯 청총과 청년동맹의 해소는 노농청년을 노동조합·농민조합 청년부로 재편성하고 청년동맹을 소부르주아 청년만의 조직으로 재결성하면서 노동조합·농민조합 청년부와 청총·청년동맹 등을 구성요소로 청년단체의 새로운 협동기관인 조선청년협의회를 건설함으로써 완성된다고 간주되었다.

청총과 청년동맹 해소론은 일제의 만주침략을 계기로 1931년 하반기부터 다소 변화를 보였다. 즉 노농청년을 조합 청년부로, 소부르주아 청년을 통일전선 조직인 반제동맹으로 집중한다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반제동맹은 조선공산당 재건그룹 산하에 노동부·농민부·반제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반제동맹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노동자·농민은 혁명적 노동조합과 농민조합으로 우선 결집됨에 따라 반제부는 학생부만을 고집하게 되었고, 이것이 고착화됨으로써 반제동맹은 학생층만을 대상으로 한 조직운동으로 변질되었다.